

제22차

한 · 일 통계협력회의 결과보고서
(동 경 회 의)

2006. 6.

통 계 청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2006.5.22~5.26(5일간) 기간중 개최된 제22차 한·일 통계협력회의 동경회의에 대한 보고서로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및 회의기간 중 수집한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통계개혁 등 통계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
- 인구주택총조사 e-census 및 인터넷조사
- 고령자통계통계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통계활동

회의를 위하여 우리는 주제별로 파악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일본 통계국에 질의서를 사전에 송부하였고, 회의는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번회의는 방문국이 질의하고 주최국이 답변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양국이 각각 사전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고, 상호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진일보된 방식으로 양자간 통계협력회의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이 회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청 국제협력과와 일본통계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화옥파견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 6월

제22차 한일통계협력회의 방문단

목 차

I. 회의결과	
1. 회의개요	
2. 회의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 회의결과	
(1) 통계정책 관련	
가. 일본통계 개관	
나. 일본통계 개혁	
(2) 인구통계 관련	
(3) 가나가와현 통계관련	
II. 한국측 회의 발표자료	
1. 중기('06~'08) 국가통계 system 개혁방안	
2. e-나라지표	
3. 2005 인구주택총조사 e-census 및 인터넷조사	
III. 일본측 회의 발표자료	
1. 통계국 업무개요	
2. 일본통계조직 및 통계제도개혁 검토위원회 검토사항	
3. 국세조사, 장래인구추계 및 가구추계 방법	
4. 가나가와현 업무 개요	

I. 회의결과

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06.5.22(월) ~ 5.26(금), 일본 통계국, 가나가와현

□ 회의주제

- 통계 개혁 등 통계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
- 일본 국세조사 및 인구통계 현황
- 한국 '05 인구주택총조사 e-census 및 인터넷조사
- 일본 지방자치단체 통계활동

□ 회의참가자

- 한국측

통계청장	오갑원
통계정보국장	이동명
인구동향과장	박경애
통계정책과 사무관	안형준
인구동향과 사무관	황해범
- 일본측

통계정책관련	통계국장 에토 외 3명
인구통계관련	외 6명
가나가와현	외 7명

□ 주요회의 일정(붙임 참조)

일 시	주 요 일 정	담당부서
5.22(월)	양국 대표단 인사 통계국 업무소개	총무과
5.23(화)	일본 및 우리측 통계정책 현황	
5.24(수)	일본 및 우리측 인구조사 현황 * 05년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통계연수소 통계센터
5.25(목)	가나가와현 업무 현황	

2. 회의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통계정책 관련

- 일본은 '03년부터 통계개혁을 시작하였으며, '05년부터는 “통계제도개혁검토위원회” 및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를 중심으로 개혁방안 검토 중
 - '05.9.부터 통계제도개혁검토위원회(민간위원으로 구성, 내각부에 설치)에서 개혁방안 검토 중
 - '06.3. 중간보고서 발간, '06.6 최종보고서 발간 예정
 - '06.3.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에서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 '06.5. 현재 국회 논의 중
 - ① '06년 중 2개* 조사의 민간개방을 위한 시험조사 실시,
 - ② 통계조사의 시장화·민간개방 계획 확정
 - * 개인기업경제조사, 과학기술연구조사
- '06.5. 현재 개혁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06.3. 통계제도개혁검토위원회가 중간보고서 발표
 - 통계행정의 문제점
 -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통계정비의 미흡
 - 세무자료, 등기자료 등 행정기록 활용의 미흡
 - 통계정보서비스의 다양한 이용제고 미흡
 - 통계행정 조정기능 미흡

○ 통계행정 개선 기본 방향

- 기본 시각 전환 : 행정기관이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 작성 → 민간과 기업이 원하는 통계 작성·제공

○ 법·제도 정비

- 기존 통계조사에 대한 규율(지정 + 승인)외에 가공통계, 보고통계 등에 대한 규율 검토
- 행정기록의 활용 촉진
- 사업소 및 기업체 조사의 모집단 정보의 체계적 정비
- 통계 data의 2차적 활용 제고

○ 통계조직 사령탑 기능 강화 및 인력 감축 추진

- 중앙부처내 통계 조정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사령탑(조정) 기능 강화방안 추진

→ 05.8. 총무성에 범정부적 통계조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통괄관” 신설

- 통계조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제기에 대응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 통계인력의 단계적 감축 추진

* 특히 GDP대비 통계조사 인력이 많은 농림수산성 인력 감축을 통해 타분야 배치 추진 중

○ 통계조사의 민간경쟁 추진(검토 중)

- 기본 방향은 통계기획은 정부가, 통계조사는 민간이 수행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임

- 06년 중 2개 조사의 민간경쟁을 통한 시범조사 실시 → 통계국 지정통계 13종 전체에 대한 민간경쟁을 추진
- '06.5. 현재 민간위탁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황이나, 내각부의 강한 압력으로 추진

< 정책적 시사점 >

- 일본의 통계개혁은 통계국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하기 보다는 행정부 전체의 혁신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 통계조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와는 추진배경과 내용에 차이가 큰 상황
- 그러나 분권형 체제로서 양국간 유사점이 많고, 검토 중인 개혁 내용이 우리의 통계정책 방향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 특히 통계행정 기본시각 전환, 행정자료 활용 제고 방안, 종합조정 기능 강화 방안은 그 전개방안을 주시하여 통계정책 수립 및 부처 협의에 활용할 필요
- 한편, 통계조사의 민간경쟁 도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나 내각부 압력에 의해 통계국이 추진하는 것인바,
 - 금년중 실시하는 2차례 시범조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관계 부처 협의에 활용해 나갈 필요

인구통계 관련

- 조사 불응률 증가 등 악화되는 조사환경에 대응하여 '10년 國勢調査에 대비한 개선책 검토 중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부재 가구 등의 증가와 개인의 사생활보호의식 확산으로 통계조사 환경이 급격히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
 - 향후 인구주택총조사가 과거 어느 총조사보다 국민적 협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됨
 - 총조사가 범국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함
 -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비밀보장에 관해서도 집중 홍보
 - 열악한 조사환경으로 조사원 확보의 어려움이 많아 조사원 확보 방안
- 차기 조사에 우편조사 및 인터넷조사 도입하는 방안 검토
- 장래인구추계 대한 다양한 가정설정 등 수요자에 부응하는 인구추계작성 필요

< 정책적 시사점 >

- 조사 불응률 증가 등 악화되는 조사환경에 대응하여 '10년 총조사에 대비한 개선책 마련
 -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 검토
 - 범국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

- 1인 및 맞벌이 가구 등 조사원 면접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증가, IT산업의 발달에 따른 자료수집, 처리 등 용이, 읍면동 통계기능의 시군구 이관에 따른 인력 동원 및 관리기능 약화 등에 개선책 마련 필요
 - 국제적으로도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e-census 등으로 전환 확대실시

- 불응 및 취약지구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필요
 - 철저한 현장조사 관리를 위한 조사대상의 중복과 누락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유기적 관리체제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취약지구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특별관리를 통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도 제고가 필요

- 장래인구추계작성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정확한 인구추계작성 강구

3. 회의결과

(1) 일본 통계정책 관련

가. 일본통계 개관

① 일본 통계조직 개요

□ 분산형 통계작성체제

- 내각부, 총무성, 농림수산성 등 각 부처별로 소관 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조직 운영
- 총무성이 중앙통계기관으로서 부처간 통계업무 조정
 - 통계업무 관련, 총무대신 자문을 위해 통계심의회를 구성, 운영
- 농림수산성 등 일부부처*를 제외한 중앙부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조사는 지자체(도도부현)에 위탁하여 수행
 - * 현장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지방통계조직 운영

□ '06년 현재 일본 통계조직 통계전담인력은 7,753명

- 중앙부처 5,607명*이며, 도도부현 2,143명
 - * 1,713명이 통계기획, 3,894명이 현장조사 업무 담당

□ 각 도도부현은 중앙부처가 위탁한 통계업무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며,

- 도도부현의 정규 인력 및 조직은 총무성이 결정하고, 소요예산을 총무성이 국고지원

< 참고 1 > 일본 통계조직 통계전담인력 현황(06.4. 현재)

구분		직원 수(명)	
총계 ¹⁾		7,753	
중앙부처	중양부처 소계	계	5,607
		본부	1,713
		지방사무소	3,894
	총무성	본부	590
		지방사무소	0
	후생노동성	본부	331
		지방사무소	0
	농림수산성	본부	311
		지방사무소	3,743
	경제산업성	본부	248
		지방사무소	76
	국토교통성	본부	88
		지방사무소	14
	기타	본부	145
		지방사무소	61
	지자체(도도부현)		2,146

주1) 총무성 통계센터 및 시정촌의 통계전담인력은 제외

② 총무성 통계조직

□ 개관

- '05.8. 통계조정기능 강화 및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해 총무성 통계국 자체적으로 개혁 시행
 - 통계국 및 통계연수소 ⇒ 정책통괄관, 통계국, 통계연수소, 통계센터 4개 부서로 개편
- 통계관련 총무성대신 자문을 위한 통계심의회 운영

□ 총무성 부서별 조직 및 기능

【정책통괄관】

- 기능 : 범정부통계제도 설계 및 개선, 통계조사 심사 및 조정, 국제통계업무, 통계심의회 사무국
- 조직 : 통계기획관리관, 통계심사관(3), 국제통계관리관

【통계국】

- 기능 : 17종 국가 기간통계 기획, 분석, 공표, 정보이용 활성화 추진
- 조직 : 통계국장, 통계조사부*, 총무과, 통계정보서비스과
 - * 5과 3관 2실로 구성

【통계센터】

- 기능 : 통계국 작성통계의 조사결과 집계, 정리
- 조직 : 독립재단법인이되, 직원은 공무원 신분 유지

【통계연수소】

- 기능 : 공무원에 대한 통계 연수 및 이를 위한 연구, 통계데이터(도서 등) 작성
- 조직 : 연구인력 14명을 포함하여 약 70명

□ 통계심의회 조직 및 기능

- 성격 : 총무대신의 자문 위원회
 - 법률상 주어진 업무에 대한 자문 기능 이외에 심의회 명의의 성명문 발표 등 업무는 불가능
 - 정책통괄관은 범정부적 업무 조정, 통계심의회는 전체 문제를 중립적으로 심의
- 구성 : 총 11명, 학식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8명 : 통계학자로 구성, 1명이 회장을 담당하고, 7명은 분과를 담당
 - * 산하에 7개 분과 운영
 - 2명 : 이코노미스트로 구성
 - 1명 : 경제단체 출신으로 구성
 - 비상근이며, 1번 회의 참석 시 5만엔 수준의 보수 지급
- 심의
 - 전체 심의 이전에 각 분과 사전심의 의무

③ 일본 통계 체제

- 국가통계의 개념은 없으며, 실용적인 차원에서 조사별로
① 응답률 제고, 또는 ②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지정통계와 승인통계로 크게 구분하여 요건을 규정, 시행 중

【지정통계】 : 06.4. 현재 56종

- 취지 : 정책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통계의 응답률 제고
- 의의 : 중앙부처(일본은행 포함)가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하거나, 국민생활에 중요한 통계를 작성할 경우
→ 지정통계 지정으로 응답자에게 **응답의무 부과**
- 절차 : 소관 중앙부처가 총무성(정책통괄관)에 지정 요청
→ 심의, 지정
* 매 조사시 지정통계로 재지정 필요
- 심의사항 : 목적, 내용, 방법, 비용 등 종합 검토

【승인통계】 : 06.4. 현재 111종

- 취지 : 통계조사에 따른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 의의 : 지정통계가 아닌 중앙부처 조사로서 그 대상이 10명 이상일 경우 총무성의 사전승인 필요
- 절차 : 소관 중앙부처가 총무성에 승인 요청
- 심의사항 : 중복성, 부담경감 방안 등

< 참고 2 > 통계별 주요 성격 정리

구분	조사 주체	의의	절차	05년 현황
지정통계	·중앙정부 + 지자체 + 일은	·정책수립에 필요+ 국민생활에 중요 ·총무성 장관 지정 ·응답의무 발생	·각 기관이 총무성에 신청 ·총무성 지정 ·목적, 내용, 범위, 일시 및 방법, 조사표 작성 계획, 공표 계획, 비용 등 종합검토	56종 * 매년 신규 지정
승인통계	·중앙정부 (지자체 위탁 포함)	·지정통계 외에 조사대상 10개 이상 통계 작성 시	·총무성 사전승인 ·중복성, 부담경감, 통계품질 검토	121종
통보통계	중앙정부 + 지자체 + 일은 +상의 +산의 * 주로 지자체	·지정통계 및 승인통계 외에 작성하는 모든 통계	·사전통보 ·중복성, 부담경감, 통계품질 검토	223종 - 신규 114 - 수정 97 - 중지 12

나. 일본 통계개혁 관련

① 추진경과 및 체제

- '03년부터 일본 통계개혁을 시작하고, 그 동안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서 중복 검토하고 있으나
 - '05년부터는 “통계제도개혁검토위원회” 및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를 중심으로 개혁방안 검토 중

【중양부처 통계담당 국장급 회의】

- '03.6. 중양부처 통계담당 국장간 회의를 통해 자체 개혁방안으로 “통계행정의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 수립
 - ① 사회, 경제변화에 대응한 통계 정비
 - ② 통계조사 효율적 실시
 - ③ 조사결과의 이용 확대
 - ④ 국제협력 추진
- 각종 검토회의를 설치하여 논의를 진행중이며, 경제센서스 창설검토회(경제센서스 검토), 통계법제도연구회(06.6. 통계법제도 개선방안 발표 예정)가 대표적

【경제재정자문회의(총리 자문회의)】

- '05년 “통계정비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 마련

- ① 통계조정기능 강화(사령탑 기능 강화) 및 이를 위한 통계법제도 개선
- ②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통계의 정비
- ③ 통계조직체제 정비

【통계제도개혁검토위원회】

- '05.9. 경제재정자문회의가 마련한 “통계정비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
 -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
- '06.3. 중간보고서 발간, '06.6 최종보고서 발간 예정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

- '04.4~'07.3. 기간 중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민간개방을 추진중인바, 동 내용의 일환으로 통계조사의 민간개방 및 시장화 방안 검토
- '06.3. 각의결정을 통해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06.5. 현재 국회 논의 중
 - 동 내용의 일환으로 ① '06년 중 2개* 조사의 민간개방을 위한 시험조사 실시, ② 통계조사의 시장화 민간개방 계획 확정
 - * 개인기업경제조사, 과학기술연구조사
- '06.5. 현재 통계국은 동 방안의 구체적인 검토를 위하여 “통계조사 민간개방·시장화 방안 연구회”를 구성, 운영 중

② 개혁방안 주요 검토 내용

□ 법·제도 정비, 통계조사 민간위탁, 조사 추진체제 최적화, 인구센서스 개선 등이 검토 중이며

○ 통계조직 개혁방안은 1차 시행되었음

⇒ '06.5. 현재 개혁방안 검토가 진행중이어서 구체 방안을 공표할 수는 없는 상황인바, 이하 내용은 '06.3. 통계제도 개혁검토위원회의 중간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

【통계행정의 문제점】

-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통계정비의 미흡
- 세무자료, 등기자료 등 행정기록 활용의 미흡
- 통계정보서비스의 다양한 이용제고 미흡
- 통계행정 조정기능 미흡

【통계행정 개선 기본 방향】

- 기본 시각 전환
 - 행정기관이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 작성
→ 민간과 기업이 원하는 통계 작성·제공

【법·제도 정비】

- 기존 통계조사에 대한 규율(지정 + 승인)외에 가공통계, 보고통계 등에 대한 규율 검토

- 행정기록의 활용 촉진
- 사업소 및 기업체 조사의 모집단 정보의 체계적 정비
- 통계 data의 2차적 활용 제고

【통계조직 사령탑 기능 강화】

- 중앙부처내 통계 조정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사령탑(조정) 기능 강화방안 추진
- 05.8. 총무성에 범정부적 통계조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통괄관” 신설
- 통계조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제기에 대응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 통계인력의 단계적 감축 추진
 - 중앙부처 : 8,571명('01) → 5,607명('06)
 - * 감축인원 가운데 1,000명은 02년에 기존 통계국 직원을 독립 재단법인인 통계센터로 분류함에 따라 감축
 - 지자체(도도부현) : 2,314명('01) → 2,145명('06)
- 특히 GDP대비 통계조사 인력이 많은 농림수산성 인력 감축을 통해 타분야 배치 추진 중
 - * 농업 GDP 10%, 농림수산성 통계인력 비중 70%

【통계조사의 민간경쟁 추진(검토 중)】

- 기본 방향은 통계기획은 정부가, 통계조사는 민간이 수행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임
 - 통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결과의 집계 기능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
- '05.3.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련 추진계획 공표
 - 06년 중 2개 조사의 민간경쟁을 통한 시범조사 실시
 - 통계국 지정통계 13종 전체에 대한 민간경쟁을 추진
- '06. 하반기 중 2개 조사에 대한 민간위탁 시범조사 시행 예정이며, 잔여 통계에 대한 방안을 '08년 시한으로 검토 중
- '06.5. 현재 민간위탁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황이나, 내각부의 강한 압력으로 추진

【통계조사업무 추진 최적화 방안(추진 중)】

- '03.7. 시행된 전자정부구축계획의 일환으로 통계분야 통계조사 등 업무 최적화 계획을 수립, 추진
- '08년 운영을 목표로 통계조사결과의 공동이용을 위한 DB 구축, 부처별 업무처리 공통 매뉴얼 작성 등 추진 중

(2) 인구통계 관련

가. 國勢조사(인구센서스) 개선책 관련(검토 중)

① 기본 사항(일본측 설명자료)

- 조사 불응률 증가 등 악화되는 조사환경에 대응하여 '10년 국세조사에 대비한 개선책 검토 중

→ '06.1.부터 국세조사실시관련유식자간담회를 통해 검토

【주요 검토 내용】

- ① 조사방법
 - ② 조사실시체제
 - ③ 조사원 확보방안
 - ④ 국민이해 증진방안
 - ⑤ 집합주택 대책 등을 집중 논의 중
- 차기 조사에 우편조사 및 인터넷조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

② 일본 인구통계 관련 질의 답변(우리측 질의)

- 국세조사와 관련하여 일정 연령(예: 100세 이상) 이상 고령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지?
 - ⇒ 실시하지 않고 후생노동성에서 100세 이상 인구를 관리하고 있음

- 외국인에 대한 별도 조사를 하는지?
 - ⇒ 별도의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조사 시 19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표를 사용함
 - ⇒ 불법체류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Census Microdata 관리 및 향후 계획
 - ⇒ Census Microdata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제공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임
 - ⇒ 다만, 자료의 일부는 표본조사를 위해 제공하고 있음

- 향후 Census Microdata 관리에 대한 계획은?
 - ⇒ 정부에서 일원화해서 관리

- 기타 통계작성을 위한 모집단으로서의 센서스 기능은?
 - ⇒ 노동력조사, 취업 기본조사, 가계조사 등의 모집단 정보로 이용

- 단위무응답과 항목무응답의 규모는?
 - ⇒ 조사 불응 4%, 실제 항목무응답 1%
 - ⇒ 항목무응답 가운데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여부 항목이 가장 많은 2~6% 무응답, 그 외 항목은 1%내외 무응답
- 무응답 처리과정에서 기준항목을 선택할 경우 절차와 근거는?
 - ⇒ Imputation 기법을 이용
- 최근 Census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 작년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률제정에 따른 조사 불응 증가와 조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
 - ⇒ 또한 장기부재, 1인가구 증가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음
- 향후 Census 자료수집 방법 개선방향은?
 - ⇒ 국민홍보강화,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조사확대 방안을 검토 중
- 사후조사 실시방법은?
 - ⇒ 2005.12.15일 기준으로 도도부현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표의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
- 실시결과 활용 및 대외공표, 오차율 현황은?
 - ⇒ 누락, 중복의 오차율을 추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회에 자료를 제공, 대외공표는 하지 않음
오차율은 순누락율 0.8%, 중복율 0.17%, 누락율 0.97%
(2000년 국세조사 결과)

- 고령화 관련 종합 통계간행물 작성방법, 주요 내용은?
⇒ 내각부에서 기존 발표된 자료를 종합정리한 것으로
고령자 부부가구, 65세이상 취업자 수 등이 포함
- 고령자 관련 특별조사(예: 고령자 일상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조사는 힘든 상황임
- 출산장려정책 및 고령화 관련 정부정책에 통계 작성
기관의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 통계국에서는 참여하지 않음
- 소지역 현재인구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국세조사를 기준으로 출생, 사망, 인구이동, 국제이동
자료로 작성하고 있으며, 도도부현까지만 작성하고,
그 외 시정촌은 독자적으로 작성
- 일본의 공식인구는 무엇인가?
⇒ 국세조사인구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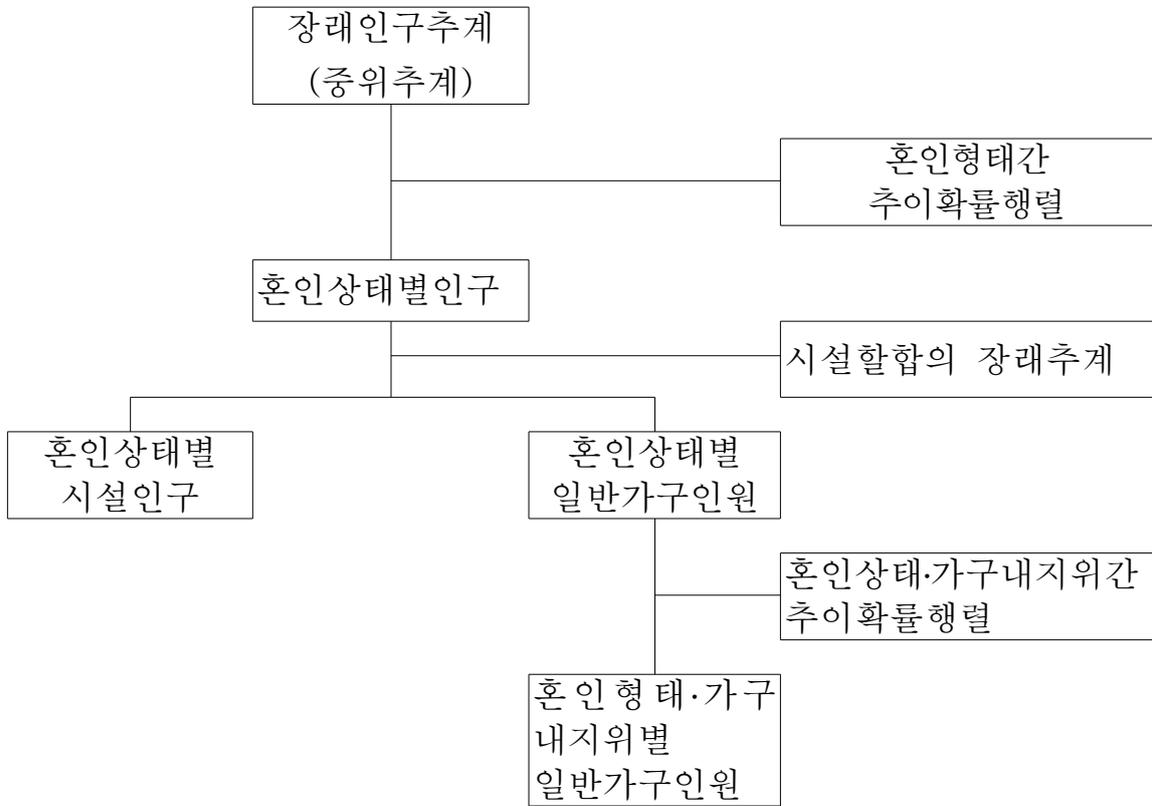
- 경제·사회 등 각종 지표에 사용되는 인구는?
 - ⇒ 행정기관의 목적에 따라 국세조사와 추계인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인구는 노동력, 인구동태 통계지표 산출에 이용

- 2150년까지 장래인구추계시 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 가정은 어떻게 했는지?
 - ⇒ 출산력: 2050년까지 완결출산력을 산출한 후, 2150년 출산율 2.08, 2050-2100년까지 출산율은 완만하게 상승
 - ⇒ 사망력: 2050년까지 Lee-Carter모형에 의해 평균수명 산출, 2100년까지 평균수명 동일
 - ⇒ 국제이동: 성·연령별 평균이동율이 향후 지속

- 기준인구 작성시 불법체류 외국인 인구 작성방법은?
 - ⇒ 기준인구 작성시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파악하지 않음

- 장래인구추계시 사망원인을 고려하는지?
 - ⇒ 과거에는 고려하였지만 최근에는 고려하지 않음

○ 가구추계 체계는?



나. 한국의 인구총조사에 대한 질의사항 관련(일본 질의)

○ e-Census 실시배경은?

⇒ 1인 및 맞벌이 가구 등 조사원 면접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증가, IT산업의 발달에 따른 자료수집, 처리 등 용이, 읍면동 통계기능의 시군구 이관에 따른 인력 동원 및 관리기능 약화 등

⇒ 국제적으로도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e-census 등으로 전환 추세

○ 불응 및 취약지구에 대한 대처방안은?

⇒ 철저한 현장조사 관리를 위한 조사대상의 중복과 누락의 최소화 할 수 있는 유기적 관리체제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취약지구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특별관리를 통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도 제고

※ 한국측 설명자료 별첨

(3) 가나가와현 통계업무 개요

□ 통계과 업무(인원 71명)

	<u>주요업무</u>
調整・情報	과 예산편성, 과 인사·복무, 통계간행물 편집·발행, 조사원관리, 통계공로자 표창, 통계협회 관련 업무 등
企劃・分析	경기동향지수, 현민경제계산 추계, 산업연관표 작성, 통계조사 조례시행 등
消費・商業統計	상업통계조사, 상업동태통계조사, 산업실태조사, 대형소매점통계조사, 소매물가통계조사, 소비자물가통계조사, 가계조사, 전국물가통계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事業所・工業統計	공업통계조사, 생산실태통계조사, 공업생산통계조사, 사업소·기업통계조사, 개인기업경제조사, 농임업통계조사, 어업통계조사
人口・労働統計	국세조사, 주택·토지통계조사, 노동력조사, 취업구조기본조사, 사회생활기본조사, 인구통계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학교기본조사, 학교보건통계조사

□ 06년도 통계과 사업내용

- 통계조사 41종(국가통계 12종, 현 통계 29종)

<국가통계: 12종>

- 국세조사, 국세조사사후조사, 국세조사시험 조사, 국세조사조사구설정, 취업구조기본조사, 주택·토지통계조사 단위구설정, 주택·토지통계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전국물가통계조사 등

<가나가와현통계: 29종>

- 사회생활기본조사, 주민기본대장인구이동보고, 사회·인구통계체계정비, 가나가와현인구통계조사, 가계조사, 학교기본조사 등

□ 가나가와현 통계보고조정심의회

- 구성 : 위원 12명(학계 대표 3인, 통계이용자 대표 2명, 현민 대표 2명, 조사객체 대표 2명, 통계종사자 대표 1인, 시정촌 대표 2명)
- 임기: 2년

<연도별 자문 건수>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문건수	9	7	4	11	8	6	9	6

